

# 윤 대통령은 왜 '천금 같은 기회'를 버렸을까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연금 개혁 호기가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야가 지난 5월 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다음 국회사로 넘기자”고 했다. 그 이유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른 정치 사안은 대개 나중이라도 경과와 이유가 나오는데 이 일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추측만 내놓을 뿐이다.

한 뒤부터였다. 사실 국회 연금특위가 막판 의견을 좁힌 13%·44%도 개혁이라 하기엔 민망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보험료율은 15%까지는 올려야 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더 올리는 것은 개악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꿈쩍도 않는 데 어떻게 하나. 보험료율을 1998년 이후 26년간 올리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4%포인트 올리는 것도 상당한 성과일 수밖에 없었다.

### 26년 만의 연금 개혁 호기, 왜 거부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 지난해부터 여권 태도 아리송 구조개혁 윤곽·로드맵 제시해야

인기 중 연금 개혁을 어떻게 두 번 하겠느냐며 보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보수 개혁을 한 다음 구조 개혁을 논의하면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조 개혁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의원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난도를 평가하면 3:7이나 2:8 정도”라고 했다. 이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8월 대통령실 사회수석 시절 “신진국 사례를 보면 구조 개혁은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구조 개혁을 얘기하면서도 그 윤곽조차 내비친 적이 없다. 국

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상당 기간 논의·조정해야 하고 정치적인 부담도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을 통합했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진짜 10년이 걸릴 지 모른다. 현 정권 임기가 3년도 남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이 하나.

사실 정부여당이 연금 개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만 아니다. 지난해 2월에도 여야가 한창 모수 개혁을 논의할 때, 갑자기 국민의 힘 기득권 간사가 구조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방향을 틀어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상한 방향 전환이었다.

여러 시각 중 가장 약성인 것은 대통령실이 보험료 인상을 부당스러워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연금 개혁안을 처리했으면 보험료는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오른다.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어떻든 대통령실이 일으킨 연금 개혁을 얘기하고 실제 행동은 반대로 가는 듯한 일들이 쌓이니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런 생각을 불식시켜려면 대통령실이 구상하는 구조 개혁의 윤곽과 로드맵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그대로 시간만 흘러가면 연금 개혁의 ‘천금 같은 기회’를 건어낸 정권으로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비판을 받을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섬 [194]

## 울릉도 오징어물회

맛은 허끝으로만 느끼지 않는다. 눈, 코, 귀 등을 포함한 온몸으로 맛을 느낀다. 여기에 어느 장소에서 맛을 보느냐에 따라 감각이 달라진다. 그때는 정말 맛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 맛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재료나 손맛의 차이도 있지만 장소 때문일 수 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장소다. 오징어물회를 서 울 인사동에서 먹는 것과 울릉도 도동항에서 먹는 것은 다르다. 게다가 울릉도 바다에서 당일 잡아온 오징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울릉도 오징어물회 맛이 특별한 이유다.

해가 기울자 오징어를 잡는 배들이 하나둘 저동항을 빠져나간다. 배들이 향한 곳은 울릉도 서북쪽 현포리 앞바다다. 그곳은 수심 100미터에서 200미터에 이르는 곳으로 오징어가 머물기 좋은 곳이다. 어둠이 내리자 오징어잡

이 배들이 불을 밝혔다. 겨우 10척 남짓이 밝힌 불빛도 불야성인데, 100여 척이 조업에 나섰을 때는 어썩을까.

다음 날 이른 새벽 조업을 마치고 들어온 오징어잡이 배 한 척을 만났다. 다른 배들은 조업 상황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밤새 오징어잡이 배에서 조업을 한 선원은 선장과 외국인 단 두 사람이었다. 물양장에 쏟아낸 오징어를 보자 여행객은 물론 주민들마저 나와서 구경에 나섰다. 옛날 같으면 이웃에게 오징어 몇 마리 싸서 맛이나 보라는 것이지만, 이제 줄 수도, 달라고 할 수도 없다. 그 맛을 아니 입맛만 다신다. 외국인 선원은 오징어가 담긴 물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바쁘게 오간다. 미리 주문한 횡집이나 식당에 배달하는 것이다. 어제 오징어물회도 이렇게 잡은 오징어였다. 건조하기 위해 해체



작업을 하는 오징어를 보니 1000여 마리쯤 될까. 배달한 것까지 더해도 2000마리는 넘지 않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나온 내장은 오징어내장장이나 누런창찌개 등을 만든다.

오징어를 함치박에 담아 옮겨온 중 한 마리만 탈출했다. 선주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오빠, 일당에서 만원 빼’라며 웃는다. 역수로 은 좋은 오징어다. 수은 상승으로 오징어잡이 조업 일수는 손으로 꼽을 만큼 적고, 여획량으로 기름값도 부담스러워지고 있다고 한다. 오징어물회 가격이 오르는 이유다. 오징어회 가격 대신 ‘시가’라고 적혀 있는 곳도 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説

### 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 공사, 재앙 될 수 있다

2030년 부산 엑스포에 앞서 2029년 조기 개항하겠다며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5일 마감된 활주로·방파제 등 공항 부지 조성 공사 일정에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10조53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이상 밖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리한 일정과 난공사에 따른 위험 부담이 너무 커 건설사들이 등을 돌린 탓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애초 2035년 개항으로 추진되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 과정에서 2029년 12월로 일정이 5년 이상 앞당겨졌다. 여기가 무지못한 북한인가. 어떻게 10년 걸리는 공사가 5년으로 단축되나. 인천공항의 경우 1단계 건설에만 9년이 걸렸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공항 전체를 해상에 지으려던 계획을 수정, 산을 깎아 육·해상에 걸쳐 짓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부동 침하 가능성 탓에 계획 검토 단계에서 배제됐던 방식을 되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상식 밖이고 후진적이다.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작업을 했던 프

랑스 전문 기업은 “태풍·해일에 취약하고 바다를 매워야 해 지반까지 약하다”면서 가덕도 공항 후보지에 대해 안전성·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주었다.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선거용 카드로 꺼내 들었고, 표를 의식한 국민의힘도 동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부적합한 곳에 무리하게 공항을 지으려다 보니 사전 타당성 조사나 사업비 추산 과정을 모조리 생략한 채 ‘무조건 지으라’는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각 당의 대선·총선 공약으로 대못이 박힌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엑스포 변수로 완공 시점까지 5년 앞당겨졌다.

부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다. 조기 완공해야 할 이유도 없어진 셈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민 대상의 한 여론조사에선 54%가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지역민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라도 조기 완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무리하게 바다를 매워 공항을 지었다가 지반 침하가 일어나면 국가적 재앙이다.



### 美 '핵 확대' 선회하면 韓 '핵 확보' 기회 찾아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인터뷰에서 “북·중·러의 핵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핵무기 확대를 검토 대상에 올리는 전문가 위원회를 포함한 초당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핵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프라나비 바디 백악관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도 “적국이 현재 계도를 바꾸지 않으면 향후 몇 년 내에 배치된(핵무기) 숫자의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형 전술핵무기인 B61-13 개발과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의 수명 연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미국은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맺은 이후 핵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오바마·바이든의 민주당 정부는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하며 기존 핵도 줄이려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군축 조약 불참을 선언하고,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 보유 계획을 진행하는 등 세계 핵 안보 질서가 요동치자 미국도 ‘핵 증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실전 배치 핵탄두를

늘려라” “핵 군비 경쟁에 나서라”고 할 정도로 더 적극적이다. 미국의 핵 정책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재집권 시 기용이 유력한 폴비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위 커 의원도 북한 핵 위협을 우려하며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나토식 핵 공유”를 말했다. 의미가 같지는 않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핵 확장 필요성을 거론하는 만큼 11월 대선을 기회로 미국이 새로운 핵 정책을 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핵 군축’을 고집하던 민주당 정부도 종전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북·중·러의 핵 폭주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중·러와 머리를 맞댄 우리만 핵이 없다. 일본은 우리보다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있지만 우리에게 없다. 미국의 핵 정책 선회에서 ‘핵 확보’ 기회를 찾아야 한다.

###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 백'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신고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

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반부패 기구로서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처벌 조항이 없어 이렇게 끝낼 사건이었다면 권익위가 왜 6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지체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6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권익위는 신고 후 90일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다가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야야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권익위의 종결 처분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품 가방 수수의 위법성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체제 ‘서울의 소리’의 합정 취재, 그리고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는, 의문만 남기고 정치적 논란을 더 키운 권익위 조사와는 달라야 한다.

## "이화영 이재명은 한 때" 인정됐다

# 이재명 구속 사법 절차 즉각 재개하라

뉴데일리 newdaily.co.kr

- 이재명·이화영 측 위법, 안 통했다.
-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부터.
- 이재명 수사·소추부터 검찰은 왜 그렇게 질질 끌었나?
- 기대했던 [조희대 사법부], 왜 그렇게 뜻뜻미지근?
- [법 앞에 만인평등] 입증하라.

### □ 이화영과 이재명은 결국 한 통속

재판부는 “알아서 깔지어다”란 위압처럼 들린다. 겁주기도 했던 듯? 이화영과 이재명 둘은 결국, 똑같은 포승줄에 묶여 있음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하긴 이화영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복권에 막대한 뇌물을 보내면서 이를 이재명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걸 누가 믿겠는가? 1심 법원이 [1 + 1 = 2] 같은 이 자명한 공리(公理)를 모른다고 할 리 없었을 것이다.

### □ 그동안 왜 그리 질질?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부터다. 검찰과 사법부는 이재명의 신병(身柄)을 어쩔 작정인가? 정상적인 마음들로서선 그동안 윤석열 정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 [김명수·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짜증이 하늘 끝까지 솟구쳐 있었다.

도대체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와 소추부터가 왜 그렇게 뜻뜻미지근했고 질질 끌었나? 밤낮 6~7월에 기소한다. 가을에 한다. 연말에 한다. 하면서 한 해가 지고, 새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또 연말이 오기를 천후 몇 차례였다?

### □ 김명수는 대놓고 직무유기

[김명수·조희대] 사법부는 또 어썩했다? “검사는 불리(소환) 조지고, 판사는 끌어(지연) 조진다”란 뺑뺑이(수감자들)의 불평을 필자도 서소문동 사법부 경내(境內)의 좁아 터진 [바들기집]에 간헐 익히 들었다.

맞다. [김명수 사법부]야말로 [운동권 사법부] 바릇 그대로. 모든 죄파 피고인들의 재판은 무한정 끌어 조졌다. 직무유기였다. 게다가 죄파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 쪽 출신 판사들은 심사하는 족족 기각했다. 유·, 무엇이라 했는가?

### □ 속속 처진 조희대

[조희대 사법부]도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관측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지명했으리라 믿은 게 착각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잘 못 봤나? [조희대 사법부]도 “재판 지연 안 돼”라고는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이는 현 정부의 그런 지지부진하고 속속 처지는 스타일에 자유 국민이 크게 실망했기 때문 아닐까?

### □ 새 진용 검찰·조희대 사법부, 분발하라

결론은 자명하다. 새로 단행한 인사를 계기로 검찰은 상상같은 사법 정의 실천의 가치 없는 칼날로 분발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에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속도를 늦추거나 줄이지 말고, “어사출도(御史出道)”의 시퍼런 서슬을 속전 속결로 내뿜어라!

[조희대 사법부]도 죄파 [법정]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우파 [활동]는 1심 판결 현장에서 법정구속하는 차별 없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함을 확실하게 보여주길!

검찰과 사법부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신청하고 발부하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행사 피고인이 한 정당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 삶은 소대거리보다 삶은 멀치 대거리가 먼저 웃는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6월 7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93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